

동북아연구회 제 1차 회의 보고

I. 개요

1. 주 제 :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동북아경제협력의 과제
2. 일 시 : 2007년 10월 11일 (목) 오후 5시 30분- 7:00시 PM
3. 장 소 : KIEP 9층 회의실
4. 참석자:
 - 패널리스트: 이동휘 교수(외교안보연구원)
장형수 교수 (한양대학교 경제학과)
 - 박제훈 인천대 교수
 - 박대식 전경련 상무
 - 정인교 인하대 교수
 - 박재영 동북아시대위원회 과장
 - 안형도 KIEP 연구위원

II. 논의 내용

☐ 이동휘위원

-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시동 및 주도, 평화와 경제의 적극적인 연계, 남북경제 공동체의 지향, 양자관계의 적극 활용, 군사적 신뢰구축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두었음.
- 문제점으로는 사실상 핵보유의 인정의 위험성, 국제역학상의 현실적 한계, 북한의 개혁개방의지의 여부, 대북경제제재의 존재, 기타 NLL문제, 정례화 여부, 국군포로, 납북자문제 등에서 미흡한 면을 보였음.
- 향후 과제로는 평화체제와 비핵화, 평화와 경제, 남북과 북미 등 3대 선순환논리가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. 또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 구분, 전략과 전술의 정밀화가 요청됨.

-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국내정치에 변화가 예상됨. 중국은 제 17차 전국인민대표회의 개최, 일본은 후쿠다 정권의 출범, 러시아는 푸틴의 정권 재창출 노력, 미국의 대북유화적인 APEC 발언 등으로 주변 환경의 변화가 예상됨.
- 성과의 연속성의 확보를 위해 로드맵의 구축이 필요하고 협력의 상세화, 제도화, 구체화가 필요함.
- 제약요인으로는 현정부의 잔여임기, 재원 및 경비 문제. 절차와 속도에 있어서 미국과의 인식차 등이 있음.
- 금번 정상회의는 incomplete success로 평가되며 70점.

□ 장형수 위원

- 매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정상회의였으며 1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제시된 것은 상당한 성과로 평가됨.
- 다만 경제협력사업의 추진우선순위, 재원조달 등은 문제로 제기됨.
- 향후 민간과 정부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.
- 재원조달은 남북협력기금으로 부족하며(현재 1조원) 나머지 재원은 민간에서 BTL, 해외항만개발펀드(project financing)으로 해결한다는 것인데 펀드의 경우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능성이 낮음. 베트남, 중국도 이제야 project financing을 시작하는 형편임.
- 해외에서 20조 조달은 불가능함.
- 공적지원이 민간의 참여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. 언론과 정부가 지원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. 지원과 경험간의 차이를 이해하여야 함.
- 불능화합의, 핵폐기, 국제기구가입, 민간개입의 순으로 이루어져야 함.

-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어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을 지원하여야 함.
- 정부는 북한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북지원을 추진하고 보건 의료, 농업협력에 대한 재원을 제공하여야 함.
- 정부는 ODA과리선언에 근거하여 빈곤감축을 위한 개발지원을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하여야 할 것임.
- 북한은 동북아국가간 다자간 협력보다는 남북간 양자간 협력에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임. 김정일 위원장이 수익성이 있는 나진항개발 보다는 개성, 해주로 협력의 범위를 좁힌 것이 그 이유. 동북아차원의 협력은 당분간은 관망.

□ 박제훈 위원

-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하여 협상용개발 과 핵무장의 양분론은 맞지 않음. 핵 보유와 협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음.
- 핵은 주변국의 핵도미노가 우려되기 때문에 핵확산을 시키지 않는 한 immediate threat로 보지 않을 수도 있음.
- 핵폐기는 소망스러우나 실제에 있어서는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이 불가피할 수도 있음.

□ 안형도 위원

- 남북 경협과 6자관련사업은 공조하에 동시에 추진해야 함.
- 금번 정상회의가 이룩한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총리급회담 등이 열릴 것임. 북한에 대한 지원과 경협을 구분하여 시행할 필요.